

POLITICS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전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전국 최다’ 지정

조국 사면 여부 오늘 결정
李 대통령, 조기정리 염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공식 메시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12일 열리는 정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기로 한 셈이다.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끊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빨리 정리하고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이라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지난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사업
전남도, 고흥·함평·곡성 선정

전남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서 고흥, 함평, 곡성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5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생활인프라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고흥군은 ‘도양love Parking & 休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통해 녹동항 인근(2380㎡)에 3층 4단(166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조성한다.

전체 사업비로 50억 원(국비 25억원)이 투입된다.

녹동항은 드론쇼, 바다불꽃 축제 및 활어센터의 활성화로 매년 수십만 명이 찾는 해양관광 명소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번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교통환경 개선, 관광객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함평군의 ‘월야면 빗그린로 생활환경 인프라 구축사업’은 함평 빗그린산단 주출입도로인 월야면 소재지부터 산단 입구 구간 0.5km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33억원(국비 25억원)이 투입된다.

빗그린산단은 자동차부품, 전전자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유치가 활발한 전남의 전략 거점 지역으로, 인근 월야면 소재지와 산단 접근성을 개선해 지역 및 산단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곡성군의 ‘옥과현 모두의 객사 프로젝트’는 옥과면 소재지 중심로를 중심으로 열린광장, 야간경관, 역사문화 포토존 조성 등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리 재생 사업으로 8억원(국비 7억원)이 투입된다.

옥과면은 유등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심한 구도심 지역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야간경관 요소가 집적된 거리로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객과 전남과학대학교 학생 등 청년층 유입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기대된다.

앞서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국토부 주관 민간상생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완도군 ‘치유의 예술섬 조성사업’이 선정돼 130억 원(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고흥·보성·완도·진도 등 4곳 추가…21개 시군 확대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교육혁신…소멸 위기 대응

전남도가 전국 22개 시·군 가운데 21곳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으며 명실상부한 교육혁신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이번에 고흥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이 추가 지정되면서 전남은 전국 최대 교육발전특구 보유 광역자치단체라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에 기존 17개 시군에 이어 고흥군,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이 추가



김건희특검 측은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한춘호 단장 및 위원들이 8일 김성태 전 생방을 회장 보석 석방 관련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 1표제’ 도입…‘당원주권시대’ 앞당긴다

정청래 대표 “당원 1·대의원 17표 당헌당규 위헌”
‘내년 지방선거 압승’ 목표…기획단 구성 등 지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일 당원과 대의원 간 표 반영 비율을 고쳐 ‘당원주권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선 6일 만인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들과 만나 “모든 법을 지배하는 헌법에서 평등 선거는 1인 1표로 규정했는데 우리 당헌·당규는 누구(당원)는 1표, 누구(대의원)는 17표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 당심과 민심에서 앞섰으나 대의원 투표에서 박찬대 후보에게 밀린 점을 언급하며 “대의원 표심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대의원 1인 1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을려 ‘대의원 1인 1표제’ 관련 당원과 의 토론, 의원총회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인 1표와 관련해) 당원, 국회의원 공개토론을 하고, 의원총회도 라이브로 중계를 하겠다. 만약 1인 1표를 하지 말자는 의원이 있으면 당원도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표 취임 직후 사무총장에게 연 말 당원콘서트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선발 절차 마련,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획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 기획단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압승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당원과의 질의 응답에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쯤 ‘당원 콘서트’를 열고, 충청 지역에 폐교를 인수해 연수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개호, 일본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추모

위령제·교민 간담회서 올바른 역사인식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당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원폭 투하 80주년을 맞아 열린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한국인 피해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했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본 방문은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가 무고하게 희생당한 2만여 명의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 교민들과 함께 추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일깨우며, 일

본 정부의 진정된 사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인 이 의원은 방일 기간동안 오사카 및 나가사키 지역 교민들이 주최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재일 동포들을 위로하고 현지 생활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교민들에 대한 권리와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원폭희생자 유가족, 현지 민간 대표, 아마다 카츠히고



김건희특검 측은 민주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한춘호 단장 및 위원들이 8일 김성태 전 생방을 회장 보석 석방 관련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인 1표제’ 도입…‘당원주권시대’ 앞당긴다

정 대표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당원콘서트 기획은 문제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전비서관을 맡았던 탁현민을 씨에게 제안했다고 전했다. 또 월 1회 당원 대상 강연 등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도 밝혔다.

이날 ‘당원과의 대화’에는 정 대표가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장경태 의원이 함께했고,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항엽 대변인도 참석했다.

정 대표는 장 의원 인선 배경에 대해 “장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제 당시 당원 중심 정당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며 “이재명 대표 시절 못다 이룬 꿈,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특위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출범할 것”이라며 “그동안 논의돼오던 대의원 1인1표제, 정책대의원 제도 전환, 전 당원 투표제 상설화 등을 이날 말까지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중의원 등이 함께한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해 위령비에 헌화하고 고국을 그리다 역을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추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방일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회 추호영, 유영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한·일간 과거사 재정립 및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결과다.

전남도는 교육과 취·창업, 지역 정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대학생 벤처창업 원정대, 벤처·로컬 창업 인턴스를 운영, 청년창업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청년과 지역의 미래를 잇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추가로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4개 지역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발전모델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흥군은 스마트팜, 드론, 우주항공 특화산업,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보성군은 차(茶)산업, 힐링, 3보향 특화교육, 명문고 육성 △완도군은 해양 치유, 케이(K)·해양바이오 맞춤형원, 글로벌 해양

“與 호남발전특위 신설, 획기적 발전 기대”

김영록 전남도지사, 환영의 글 올리

김영록 전남도지사(사진)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신설에 대해 “호남의 목소리가 당 운영 전반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호남의 역할과 위상이 정당 체계 속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됐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제2 우주센터 조성, 무안국 제공항 활성화 등 전남 핵심 현안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호남 소외론’에 대해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본산이며, 민주당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바로 잡아준 어머니 같은 존재”라며 “그럼에도 호남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외돼왔고, 중앙정치 무대에서의 입지도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 철학이 이번 호남 특위를 통해 실현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위가 국가 발전과 민주화 과정에 기여해 온 호남의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획기적인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



전남도의회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국정과제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도의회 의대특위, 국정기획위에 의대 설립 촉구
전국 유일 의대 없는 전남…이재명 대통령 공약 이행 요구

전남도의회 ‘전남도 통합대학교 국립 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의대 특위)가 8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의 국정과제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의대 특위는 이날 김문수 국회의원과 국정기획위 사회1·2분과 분과장을 잇따라 만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의 의료 현실을 설명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공동위원장인 신민호(순천6)·최선국(목포1) 의원을 비롯해 김화신(비례), 최정훈(목포4), 진호건(곡성) 의원이 동행했다. 이들은 면담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정기획위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민호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며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가 이미 통합

에 합의하고 공동 준비에 나선 만큼, 지금이 설립의 최적기이며 반드시 이번 국정과제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국 공동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는 도민의 헌법상 건강권 보장과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약속한 만큼, 이재는 정부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김대균 의장이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등 지방의회의 총의로 전남도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의대 특위는 신민호·최선국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나광국(무안2), 박현숙(비례), 김화신, 손남일(영암2), 최정훈, 정영권(순천1), 임형석(광양1), 진호건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향후 중앙정부·국회·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전방위적인 설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